

[종합·해설]

한·미 FTA 조기비준 긴밀 협력키로

李 대통령 폐루서 부시와 ‘고별 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각 23일)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폐루리마에서 만나 양국간 협안을 논의했다.

APEC 정상회의 개막 직전 부시 대통령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미일 3국 정상 회담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차례로 개최해 별도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한미 정상 회담은 약 10분간, 한미 정상회담은 15분간 각각 열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로,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3차 정상 회담 이후 3개월 보름여 만에 열린 것이다.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의 짧은 식별 정상회담이었지만 두 정상이 7개월 만에 4번이나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그간의 한미관계 진전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방향과 함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간 공조방안, 북핵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겸증의정서 타결과 핵 불능화 과정의 마무리를 위해 내달 초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FTA 조기비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FTA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정상의 합의는 원론적이라지만 한미FTA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프로그램 시행, 한국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 지위 격상 등 그간 양국이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아소 다로 총리가 북핵문제와 금융위기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조를 취하기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폐루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각) 리마 미리어트 호텔에서 조지 부시(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소 다로(왼쪽)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앞서 밝은 표정으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로 했고 특히 교차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선 내달 초 재개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3국 정상이 북핵 6자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북핵 겸증대상 및 방법을 둘러싼 북미간 이견으로 교차상태에 빠진 6자회담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적지 않

다는 지적이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3국간 협력의 틀과 방식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6자회담과 APEC 등 다자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APEC 이후 2년 만으로, 3국 정상은 매년 열리는 APEC 기간에 3국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APEC, 적극적 경기 부양책 펴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각 23일) 폐루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APEC 1차 정상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경기대응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가운데 세번째 발언으로 나서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로 실물경제로 전이되면 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고 이러한 신뢰 상실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까지의 국제 공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적극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기회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선 APEC 국가들이 무역,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 DDA 세부원칙 협상의 연내 타결과 농업 분야의 SSM(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분야 부문별 자유화를 비롯한 몇 가지 미해결 과제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경제 부상의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 국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으로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하며, 지역간 협조와 국제공조를 통해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F1 국가 지원은 대선공약 사항”

한나라 박재순 최고위원 “鶴을 국조로 지정” 제안도



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국가 상징 새 선정 법국민주진보부’가 지난 7월 30일부터 보름

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10명 가운데 67명이 국조로 지정하고 싶은 새로 화를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또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적 지원에 난색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라며 “문화부의 반대 이유는 논리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가깝다”며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부터 장관 힘 세진다

자율 임명 고위직 비율 50~60%로 확대

내년부터 행정부 고위공무원(실·국장급) 직위 가운데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의 50%에서 65%로 늘어나는 등 장관의 인사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연공서열을 없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3급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폐지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관리하고, ‘가, 나, 다, 라, 마’ 등

5개 직무등급으로 분류된 이들 중에서 직위별 업무 특성이나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발탁해 임명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부처 내외의 경쟁을 통해 채우는 ‘공모직위’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대신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의 비율을 50%에서 6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민간인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